

KMI 동향분석

VOL.50

2017 SEPTEMBER

발간년월 2017년 9월(통권 제50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정책동향연구본부 동향분석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 미나’ 지상중계

김민수 동향분석실 전문연구원

(guan72@kmi.re.kr/051-797-4787)

김연수 동향분석실 연구원

(ykim@kmi.re.kr/051-797-4789)

최지연 해양정책실 부연구위원

(jychoi@kmi.re.kr/051-797-4713)

홍장원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실장

(jwhong@kmi.re.kr/051-797-4721)

이주호 동향분석실 실장

(jooho@kmi.re.kr/051-797-4671)

지역 해양수산 산업의 전략적 발전 방안과 실천 과제를 모색하고자 설립된 ‘해양수산 전국포럼’은 지난 9월 27일 춘천의 강원연구원에서 첫 번째 지역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를 주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강원연구원은 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강원도의 북방경제 거점 조성, 해양수산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해양 레저스포츠 육성, 크루즈 관광 거점 조성 등에 대해 함께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포럼은 지역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세미나는 시도 연구원과 함께 개최한다. 또한 대학과 해양수산부, 지자체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산·관·학·연·정 해양수산 지역 협의체로 해양수산 부문을 지역균형발전의 주축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포럼은 내년 말까지 전국 13개 도시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세미나의 제1주제인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연안·해양 지역균형발전체계’와 관련해 최지연 KMI 연구위원은 국가경제의 핵심공간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연안·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6+1 연안·해양권역 지역균형발전 구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연안·해양권역을 공존경제해역권(인천·경기), 환황해연계해역권(충남·전북), 섬·新경제해역권(전남·경남), 청정·평화해역권(제주), 동북아거점해역권(부산·울산), 심해·북방해역권(경북·강원)과 내륙해양영토권(충북 등 육상내수면 지역)으로 나누어 연안·해양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해양수산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3대 추진과제로는 ‘연안·해양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 ‘중앙·지역 소통 및 협업체계 마련’, ‘연안·해양 지역성장 지원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제2주제인 ‘해양관광문화 국정과제와 지역발전전략’을 발표한 홍장원 KMI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은 세계 해양관광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국내 해양관광시장 다변화 추세를 반영한 국정과제로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을 위한 해양관광산업 육성 전략을 소개했다. 그리고 강원도에 특화된 크루즈산업과 해양레저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과 청정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와 해양복지 관광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관광 목적지로서 강원도 입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3주제 발제자로 나선 김광섭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장은 강원도의 해양수산 발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강원도는 향후 북방경제시대 중심 거점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수도권과의 접근성 역시 뛰어나 국내 해양 레저 관광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강원도는 강원지역을 환동해권 거점항만 권역으로 구축하여 對북방 교역의 중심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관광산업을 권역별로 특화하여 강원지역을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의 허브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자연해안 공간 확보,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수산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 등도 2017년 강원도의 주요 해양수산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제4주제를 발제한 김충재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원도 해양수산 지역발전 계획 및 주요현안에 관해 발표했다. 강원도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인구 감소 대책 마련, 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물류·교통인프라 확보 필요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양식기술의 발달과 북방경제 시대의 도래, 활발한 동해 교통망 확충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지역 해양수산 핵심 과제로는 어획어업에서 양식어업으로의 전환, 수산제조업의 첨단화, 해양관광클러스터구축, 해수자원의 다목적 활용, 북방경제협력 준비 등을 꼽았다.

제2부 종합토론에서 첫 번째로 토론한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한 지역 주도적인 해양수산 혁신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해양수산 산업혁신생태계 구축, 연안·해양가치가 살아있는 다층적 연안·해양공간이용개발전략 마련, 연안 해양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주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동규 한림대학교 부총장은 지역 내 ‘핵심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며, 해양·수산 핵심인재(키맨) 중심 정책 마련, 지방분권 차원에서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평창올림픽 기간 대형크루즈선 유치 등을 통한 해양도시 이미지 구축, 강원도 내 해양문화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재선 경동대학교 교수는 강원도가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양수산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도 차원의 혁신적 정책 개발, 동해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 강원도 국립수산물대학 설립, 기후변화대응 선제적·주도적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유상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장은 동해·묵호항 중심의 항만 개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북동항로 및 환동해 산업 교류 활성화, 컨테이너처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규 물동량 창출, 항만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진형주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지역 현안 해결이 전제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지역 대학·주민·어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작은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육동한 강원연구원 원장은 강원도 해양수산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으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도 해양수산 기반 지역균형발전 큰 그림을 KMI와 함께 그려 나갈 예정이며, 북극연구 지원기지 구축, 연안방재연구센터 건립,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 등 지역 해양수산 사업 발굴 및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의 발제와 토론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번 세미나로 전국 제13개 도시에서 개최될 ‘해양수산 전국포럼’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향후 지방분권화 시대에 해양수산이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으로 발전하는데 포럼의 역할이 기대된다. **둘째**, ‘중앙과 지방’, ‘량과 질’, ‘육지와 해양’,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통 해양산업과 新산업’의 조화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균형’된 지역발전이 필요하다. **셋째**, 강원도가 핵심 자산인 바다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바다의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특수성과 강점을 활용하는 해양수산 도정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별 현안 해소, 규제 완화 추진과 더불어 강원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 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조화를 모색하고, 특히 ‘사람’ 중심의 혁신·융합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에서 연구해야 할 시급한 현안과제로 연어, 명태 등의 조기 산업화(피시팜)연구, 어촌 소멸 방지 방안 연구, 어촌의 휴양 및 레저활성화 방안 연구, 북방물류 활성화 방안 연구, 연안방재 연구 등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시급과제는 연내 KMI와 강원연구원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션 I.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지역발전 전략

발표 1.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연안·해양 지역균형발전

최지연 KMI 해양정책실 부연구위원

연안·해양지역은 국가경제의 핵심공간으로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나가는 교두보

■ 연안·해양지역은 항만 등 물류거점공간, 수산 등 인류식량공급처, 해변·해양레포츠 등 해양관광휴양지, 산업단지기업 등 일자리 창출 공간 등 국민경제의 핵심공간으로 활용

- 우리나라 연안·해양지역은 압축적 고도성장을 견인한 국민경제의 핵심공간으로, 세계도시인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등도 연안·해양을 통해 크게 성장함
- 우리나라의 연안·해양지역은 수출입물량의 99%를 담당하고, 연간 1억여명이 해수욕장¹⁾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산물 등 식량의 핵심공급처²⁾이면서 산업단지 449개소(전국의 39.9%) 등이 입지해 있는 등 국가경제의 핵심공간으로 연안·해양지역의 질적 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나가는 교두보로 활용해야 함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는 해양수산업의 고도화·다변화와 연안·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을 마련 중

■ 최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안·해양을 기반으로 한 항만, 수산, 해양관광, 재해안전, 해양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정책·사업수요가 크게 증가

1) 2015년 기준,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 해양수산부는 FAO의 '2016 세계수산물양식현황' 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 수산물섭취량은 연간 58kg로 세계 1위(노르웨이 2위(53.3kg), 일본 3위(50.2kg))로 발표(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7. 2. 13)

- 현재 지방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절벽과 지역활력 저하, 기업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안·해양을 대상으로 항만재생·재활성화,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 바다목장사업, 해양치유관광, 노후·유휴산업단지와 조선소 등 산업유물의 재활용, 갯벌·모래해안 등 생태환경복원과 해양과학기술 기반의 재해안전 대응책 강화 등 융·복합형 해양수산 산업의 고도화와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지역에서 추진 중인 많은 해양수산 관련 정책·사업은 연안·해양지역별 해양수산업의 특화도·다양성과 사회경제적 기반의 차이 등을 고려해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부문별 기능분리적 접근과 획일화된 사업내용으로 연안·해양지역 성장시너지를 제고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함
- 따라서 지역 고유의 연안·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특화도와 다양도, 연안·해양지역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종합적 연안·해양지역성장체계를 마련해 국가와 지역 해양 잠재력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1 연안·해양권역 지역균형발전 구상(안) 제안을 통한 연안·해양지역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방안 모색 필요

■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안·해양지역의 가치와 발전역량 등을 응집한 ‘6+1 연안·해양권역 지역균형발전구상(안)’ 검토 필요

- ‘6+1 연안·해양권역 지역균형발전 구상(안)’은 연안·해양지역별 발전혁신역량증진과 해양수산업 고도화와 지역 비즈니스 연계, 지역 연안·해양자원의 지속가능이용,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조성과 복지 실현, 친수문화와 생태환경 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임
- 전국 연안·해양지역의 발전역량, 지역 일자리와 경제산업구조, 주거안전, 복지, 친수문화, 해양환경 가치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연계 패키지 지원 등을 위해 6+1 연안·해양권역 설정과 지역 균형발전방향 제시 필요함

※ 6개 권역: 공존경제해역권(인천·경기), 환황해연계해역권(충남·전북), 섬·新경제해역권(전남·경남), 청정·평화해역권(제주), 동북아거점해역권(부산·울산), 심해·북방해역권(강원·경북)

※ +1권역: 내륙해양영토권(육상 내수면)

■ ‘6+1 연안·해양권역 지역균형발전구상(안)’의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안·해양지역 맞춤형 균형발전방안’, ‘중앙·지역 소통 및 협업체계’, ‘연안·해양 지역성장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안

- ‘연안·해양지역 맞춤형 균형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항만·산업도시, 수산·관광기반 중소지역, 어촌·섬 등 연안·해양지역과 배후지역과 연계한 해양수산 부문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하고, 항만·어항 등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성장지구 등 거점개발과 낙후·노후지역의 연안·해양형 도시·지역재생 추진 등을 위한 다층적 연안·해양지역성장 전략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부문 국가정책과 지역정책 연계와 일·자·라·지·역·별 특화산업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중앙·지역 소통 및 협업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관련 지역현안 발굴과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이행 및 효과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과 지역의 상시적 소통과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해양수산 지역발전지원센터(가칭)’을 설치해 지역주도사업의 국가정책화 추진 및 지역의 융·복합 협력사업의 지속적·일관적 추진을 지원해야 할 것임
- ‘연안·해양 지역성장 지원체계’를 위해서는 연안·해양권역별 종합발전계획체제인 ‘전국 연안·해양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해 체계적 지역정책·사업 추진과 연안·해양지역발전성과 관리 등이 필요하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추진 중인 지역발전체계와 연계한 연안·해양지역 지역발전 체제가 필요함

발표 2. 해양관광문화 국정과제와 지역발전전략

홍장원 KMI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

세계 해양관광 시장 지속적 성장, 국내 해양관광시장 다변화

■ 세계 관광시장은 2012명 10억 명에서 2030년 18억 명으로 성장 전망되며, 중국성장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시장 규모 확대

- 세계관광기구(UNWTO), 유럽연합(EU)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강조하며, 해양관광을 새로운 관광개발대상으로 선정함

■ 국내 해양관광시장 다변화에 따른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 강화

- 해수욕, 해변휴식에서 해양관광활동의 공간과 대상의 확대, 체험형 관광활동에 대한 선호도 증가함
- 해양관광산업이 마리나, 크루즈, 수중레저 서비스업 등으로 다변화되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함
- 다만 지역 간 차별성 부족, 유사시설의 중복투자, 과도한 기반시설 투자 등은 관광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을 위한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산업 육성

■ 관광분야 국정과제 정책목표는 관광수용태세 개선과 융복합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음

- 마리나 서비스업 확대, 크루즈관광객 200만명 시대 개막, 해양관광 저변 확대 및 어촌관광 활성화, 해양치유관광 및 해양복지서비스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우선 마리나 산업과 관련해서는 마리나업(대여, 정박) 확대, 내수면/마리나 클러스터 구축(제품판매, 기술교류, 인력양성) 추진함

- 크루즈 관광과 관련해서는 크루즈관광발전 토대 구축, 국적선사 육성,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함
- 해양관광 및 어촌관광 활성화 관련해서는 해양관광 창업지원, 관광상품 개발, 해중경관지구 지정 등을 추진함
- 해양치유관광 관련해서는 해양치유거점 지정(4개소), 해양/복지 휴양공간 조성 등을 추진함

강원도는 ‘크루즈산업과 해양레저산업의 지역차별화’와 청정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및 해양복지관광’ 기반 확보 필요

■ 강원도는 국내 최대의 관광목저지로 폭넓은 관광시장 형성

- 평창올림픽이라는 메가이벤트는 지역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
- 이에 따라 해양관광 분야에서도 동해안권의 아름다운 해안경관, 해수욕장, 수산물, 해양관광자원 등 전통적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맞춘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함

■ 첫 번째 과제로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크루즈산업과 해양레저산업의 지역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안 필요

- 2017년 크루즈관광산업은 중국의 영향으로 지난해까지 2배가 넘는 성장세가 위축되었지만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환동해 시장은 새로운 성장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최근 속초항 크루즈터미널 개장은 기반시설 제약을 해소했으므로 지역축제, 문화콘텐츠를 토대로 한 기항지 관광상품과 강원권의 한류문화를 바탕으로 ‘러시아↔일본↔동남아’를 연계하는 크루즈 상품라인을 구축하도록 함
- 또한 평창올림픽을 기회로 동해안권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수도권의 철도와 항공을 환동해 크루즈와 연계시킨다면 새로운 크루즈 시장의 형성이 가능할 것임
- 강원도는 수중레저(스킨스쿠버, 스노쿨링)와 서핑, 바다낚시를 위한 공간으로 매니아 층에게 인식되어 왔으므로 이를 대중화시키는 전략을 통해 수도권의 해양레저 교육, 체험 허브로 발전시키도록 해야 함
- 강원도의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어촌마을과의 협력으로 교육·체험 공간을 조성함으

로써 바다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마을단위 관광사업의 콘텐츠를 다양화시키도록 함

- 이와 함께 지역대학, 지역 해양레저업체를 활용한 해양레저축제, 이벤트 개최를 통해 지역의 청년 인재와 레저사업체를 연계시키도록 함

■ 두 번째 과제로 강원도의 청정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와 해양복지관광 기반 마련으로 국민관광 목적지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키도록 함

- 최근 관광트렌드는 웰니스, 웰빙의 영향으로 체류/휴양형 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해양치유 자원발굴 R&D 사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강원도의 해양경관·치유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마을이나 휴양마을을 조성·지정하여 해양관광의 영역을 확대시키도록 함
- 해양치유마을의 지정은 기존 어촌마을, 해수욕장, 해안산책로(해안누리길)과 해양치유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치유와 휴양이 연계되도록 함
- 해양치유마을이나 치유시설이용은 관광객이나 은퇴자 층 이외에 노년층, 사회취약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해양복지바우처 마련) 해양에서의 복지관광이 실현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도록 해야 함

세션 II. 해양수산 지역발전계획 및 주요 현안

발표 3.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계획

김광섭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장

강원도 해양수산 분야 여건

■ 북방시대, 유라시아 연계 한반도 물류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증대

- 북방물류시대, 신물류체계 구상에 따라 중·러 북방물류시장을 연결하는 국제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
- 크루즈 및 컨테이너 대형화 추세에 발맞춰 대북방 여객 물류의 중심 경제거점으로 개발한다면 강원도의 경제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강원도는 국내 해양 레저 관광의 메카, 향후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허브로 부상 기대

- 강원도는 국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지일 뿐 아니라, 최근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증가하면서 수중레저와 서핑, 바다낚시를 포함한 해양 레포츠의 메카로 부상함
-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다양한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강원 지역이 동북아 지역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어획어업에서 양식어업, 단순가공식품에서 고차가공식품으로 수산식품산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수산업은 오랜 세월 강원도의 주요 생산동력으로 기능했으나, 최근 연근해어업의 생산이 정체되는 등 어획어업 및 단순가공 위주의 수산업이 위기를 직면하고 있음
- 이에 수산 양식 기술 개발, 수산식품 고차가공 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의 구조를 개편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증대됨

강원 지역 해양수산 발전계획

■ 환동해권 거점항만 구축을 통해 대북방 교역·관광 활성화 모색

- 송정을 포함한 항만배후 지역에서 환경오염, 정주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도시 슬럼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며, 컨테이너 야적 공간 부재 등 시설 부족으로 관련 산업 및 신규 화물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항만배후단지로 조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이 강원 지역 주요 과제로 부상함
- 이와 함께 동해·속초항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중국 상해자유무역시험구에 상응하는 자유항만으로 지정하여 북방교역의 중심지로 개발할 방안을 모색 중
- 더불어 크루즈 산업이 고부가 관광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환동해 크루즈 상품라인을 개발해 관광 신성장 동력으로 모색할 계획임

■ 전국 최고의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허브 구축

- 강원 해양레저관광발전 마스터플랜('16)에 따라 강원 지역 연안 관광 사업을 권역별로 특화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제1권역(속초~고성)은 체류형 체험관광, 제2권역(강릉~양양)은 해양레저복합공간, 제3권역(동해~삼척)은 해상 낚시 공원 및 어촌체험특화마을로 특화할 예정임
- 이 과정에서 어촌관광체험마을, 정동 해안단구 힐링 로드, 가족 친화형 해상낚시공원, 사계절 테마해변 등을 조성하여 어촌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기반 구축을 모색 중임

■ 안전하고 건강한 자연해안 공간 확보

- 해안의 안전하고 건강한 활용을 위해 해안선 변화 추이를 연구하고, 연안 침식에 대한 과학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안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7개소가 완료된 연안정비사업 연말까지 10개소, 2018년에 13개소에서 추가 실시할 예정임
- 이와 함께 2018년 동해안 6개 시·군에서 해상드론 인명구조대를 시범 운영한 뒤 추후 해수용객 인명구조, 이안류, 해파리 출몰 관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 시행할 것임

■ 수산업을 동해안 미래 중심산업으로 육성

- 2016년 첫 양식에 성공한 연어외해양식,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자체 개발에 성공한 우렁쟁이 종자 육성 등을 중심으로 미래 전략품종을 육성하고 산업화에 주력해 수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함

- 이와 더불어 낙후 지방 어항 시설을 정비하고 어촌정주어항을 개발하여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모색하고, 어업인 복지증진을 통해 어촌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수산식품 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추진

-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설립을 통해 수산식품 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고자 함
- “우럭 미역국 진공포장 간편식” 개발, 강원 명태·황태·코다리·북어·명란젓·창난젓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명태 산업 관광 특구 지정, 수산가공산업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수산 가공식품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임

발표 4. 강원도 해양수산 현안연구사업

김충재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인구감소, 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물류·교통 인프라 확보가 강원이 안고 있는 숙제

■ 어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수산물 생산량 감소 등이 강원도가 직면한 문제점

- 강원도 어업가구 수는 1970년 19,023가구에서 2016년 2,259가구로 88.1% 감소함
- 강원도 수산물 생산은 1970년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10% 이상에서 최근 1%대(1.9%)로 감소함
- 인구의 노령화와 중국의 불법조업 등의 영향으로 수산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어획어업 중심 수산물 생산 구조, 수산식품 제조업의 영세성 등은 강원 지역 어업의 지속가능성 저해 요소

- 강원도의 수산물 생산 구조를 살펴보면, 어획어업의 비중이 90% 내외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내수면 또는 양식어업의 성장은 더딘 편임
- 원료부족, 가격상승, 인력 부족, 산업의 영세성 등으로 전국 수산가공품 생산액 중 강원도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7%에서 2015년 3.8%로 하락함

■ 2007년 이후 강원 지역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확대, 냉장 설비, 물류·교통망 등 각종 인프라 부족

- 2007년 이후 강원도의 수산물 수출액은 400억 원 내외인 반면 수입액은 2007년 900억에서 2015년 1,700억 원에 이르러 무역수지적자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강원도의 냉동시설 관련 동결·냉장·제빙·저빙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편이며, 선주, 화물 등 기타 인적·물적 자원도 열악한 상황임
- 뿐만 아니라 강원 지역은 항만배후단지 및 거점 마리아의 부재, 동서 간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관광비용 및 물류비 상승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양식기술의 발달과 북방경제 시대의 도래, 활발한 동해 교통망 확충은 강원도의 기회로 작용

■ 강원도 양식산업 기술의 발달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 강원도 고성군에서 2016년 연어양식에 성공한 이래, 봉포항 앞바다에 2,000톤 규모의 연어 양식 시설을 구축함. 향후 10만 톤까지 연어 양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어획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성공적 전환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향후 동해안을 양식산업 지대로 조성한다면 내수를 넘어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북방경제시대의 도래는 강원도 물류산업, 레저산업, 제조업 활성화 기회로 작용

- 2030년 북극항로가 상용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로 동해안의 물류 유통 거점 기능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아시아철도운송 기반의 확대는 강원도 물류산업, 레저산업, 제조업 등을 활성화하는 기회로 작용될 수 있음

■ 강원 지역과 연계된 동해안권 교통망 확충은 물류비 절감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에서 동해안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단축, 올해는 원주-강릉 복선 전철 완공 예정이며,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도 2022년 안에 완공될 예정임
- 동해선(강원-제진)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는 등 강원 지역과 연계된 동해안권 교통망 확충으로 향후 관광, 레저, 물류 산업의 수요 증가와 물류비 절감이 기대됨

■ 동해안 휴양·레저의 메카로 부상

- 강원도에는 다이빙, 서핑 등과 관련된 레저 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며,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도시 젊은 층의 레저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향후 평택-삼척 고속도로 건설, 유라시아루트 개발 등으로 환동해 해양레저, 헬스케어 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강원지역 해양수산 핵심과제 및 현안

■ 기르는 어업의 조기 산업화는 일자리 창출, 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수

- 어획어업에서 양식어업으로의 패러다임 변환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확보 가능함
- 특히 연어외해가두리양식과 명태, 송어 등 한해성 수산자원의 양식이 강원도 동해안의 주요 동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양식업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종자개발 및 자체 종묘생산 기술 확보 뿐 아니라 사료와 백신 개발, 인력양성 등 관련 산업기술의 개발도 중요한 만큼,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대학 등 다양한 전문 기관의 유치와 협력이 필요함
- 더불어 현재 서해와 경남, 제주에만 위치한 양식 관련 국립연구센터를 강원도에 유치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양식 산업 기술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음

■ 향후 어획량 감소, 노령화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산제조업의 첨단화가 필요

- 특히 생산성 제고, 인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1차 가공산업의 전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고차가공품 개발이 필수적이며, 나아가 3,4차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설립 방안도 모색해야 함

■ 해양휴양과 연계된 해양레저산업 육성으로 해양관광클러스터 구축

- 동해안이 새로운 해양레저 명소로 부상하면서 레저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강원 지역 해안과 연안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서핑, 스쿠버다이빙, 낚시 등 해양레저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상권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호텔, 리조트 등 휴양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휴양산업과 해양의료산업을 아우르는 해양관광클러스터를 육성한다면 강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해수자원의 다목적 활용은 안정적 식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식수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은 연안 지자체가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항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특히, 현재 생수, 간수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심층수자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강원이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이며, 이밖에도 해수를 활용한 냉난방의 상용화, 해수 금속 자원 활용 등 해양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거점항만 개발 및 물류교통망 확보로 북방경제 선제 대응

- 북극항로의 개발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물류거점항만의 조기 개발, 컨테이너 전용 부두 구축, 북극 연구센터 유치, 쇄빙연구선 모항 지정 등 강원 지역을 북방경제 허브항만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바닷길 뿐 아니라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국토 중심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북극 항로를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배가해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종합 토론

(좌장)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양창호 KMI원장

안동규 한림대학교 부총장

어재선 경동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유상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장

진형주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육동한 강원연구원 원장

(* 토론자는 토론발표 순)

토론 1. 「지방분권 시대 대비한 지역 주도적 해양수산 혁신 성장 필요」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지역의 해양수산 산업혁신생태계 구축, 연안·해양가치가 살아있는 다층적 연안·해양공간이용개발전략 마련, 연안 해양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주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 지역 해양수산 산업혁신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와 연계·추진 필요

- 자치분권시대의 지역균형발전 목표 아래 일자리 창출하고, 교육, 복지, 경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의 해양수산 산업 중 주력산업·지역기반산업·협력산업 등 지역산업생태계에 기업, 해양과학기술, 혁신지원기관 등 혁신역량을 더해 연안·해양지역 발전을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함
- 각 분야의 산업을 넘어서 바다를 이용한 모든 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지원해야함

■ 연안·해양가치가 살아있는 다층적 연안·해양공간이용개발전략 마련이 필요

- 연안·해양도시·지역의 위계에 따라 연안·해양성장 거점화, 중소지역간 연계구조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다층적으로 마련해 추진해야 함
- 단순한 공간 이용, 기능적 차원의 대책이 아니라 지역별로 특화되고, 국토개발 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다층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함

■ 연안 해양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주도의 거버넌스 구축

- 지역 단위 해양수산 정책 중 유사 중복사업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백화점식의 사업추진보다는 지역특성과 기능에 맞도록 합리적 체계적으로 사업이행과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KMI는 ‘해양수산 전국포럼’을 통해 지역 특수성에 기반한 발전 비전 수립과 지역 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 각 분야 산·관·연·학·정으로 구성된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씨그랜트 사업과 같은 실천적 사업을 수행하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

토론 2. 「지역 내 ‘핵심인재 양성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안동규 한림대학교 부총장

**지역 내 해양·수산 핵심인재(키맨) 중심 정책 마련, 지방분권 차원에서
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평창올림픽 기간 대형크루즈선 유치 등
토한 해양도시 이미지 구축, 강원도 내 해양문화 활성화 필요**

■ 자치분권 차원에서 지역 내 해양·수산 핵심인재 중심의 일자리 생태계 구축 필요

- 중앙정부에서는 인프라 중심의 하드웨어가 중요하지만, 지역 차원에서서는 지역 내 핵심인재인 ‘키맨’의 양성이 필요함
- 이러한 핵심인재를 중심으로 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를 통해 지역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평창올림픽개최를 계기로 해양·수산 기반의 지속가능한 강원지역 성장 모색 필요

- 밴쿠버 올림픽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교훈삼아 평창올림픽이 강원도를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
- 올림픽 기간 내 강릉에 대형크루즈 유치를 비롯해 개막식과 같은 큰 행사에 강원도가 해양도시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을 중심으로 강릉, 속초 등 강원지역 내 내륙과 해양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이 필요함

■ 강원지역 내 지역의 연안·해양·수산자원의 적극적 이용 필요

- 춘천과 강릉은 해양레저관련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우선 강원지역 내 부족한 해양레저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 인프라 구축도 더불어 해양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문화적 인식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하고, 창업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는 바다문화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북강원도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이 필요함

토론 3. 「강원, 지리적 우위 바탕 해양수산 허브 역할해야」

어재선 경동대학교 교수

도 차원의 혁신적 정책 개발, 동해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 강원도 국립수산대학 설립, 기후변화대응 선제적·주도적 연구 수행 필요

■ 강원지역,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적 활용도 높여야

- 강원 지역 내 바다에 대한 인식이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낮아 해양관련 자원이 많음에도 활용을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존재함
- 중앙정부차원의 논의보다는 도차원에서의 혁신적인 해양수산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 강원도 내 새로운 국립수산대학 창설 또한 필요함

■ 동해를 중심으로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 필요

- 지리적으로 국내에서 해양심층수는 강원도에서만 취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적 장점을 활용하여 도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해양심층수산업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음
- 내년 강원도에서 해양심층수 학술대회를 개최 할 예정인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 및 도차원에서의 홍보가 필요함

■ 강원지역 내 지리적 강점을 살린 해양수산허브 역할 필요

- 수산 분야에서 많은 강점이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이 다소 미흡함.
- 충청북도의 경우 바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가 가진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동해는 전 세계적으로 수온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지역 중 하나이며, 해일이나 쓰나미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변화 관련 연구를 선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요코하마 아마시타 항의 사례를 참고로 전통적 산업과 관광을 연계하는 어촌개발 및 도시재생 모델 개발이 필요함

토론 4. 「강원, 동해·묵호항 중심 항만 개발 나서야」

유상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장

**북동항로 및 환동해 산업 활성화, 컨테이너 처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규 물동량 창출, 항만 기능 재정비 필요**

■ 강원지역 동해·묵호항 중심의 항만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강원지역 5개의 무역항 가운데 동해·묵호항이 유일한 국가관리항이며 신규 물동량 창출 가능함
- 동해·묵호항의 화물처리량('16년 기준)은 3천2백만 톤으로 강원지역 항만 전체 처리물동량의 약 61%를 처리하고 있음
- 옥계·호산·삼척항은 전용 항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속초항은 물류기능이 미흡하여 신규 물동량 창출에 제한

■ 동해·묵호항 활성화를 위해 신규 투자 통한 인프라 구축, 신규 물동량 창출, 항만 기능 재정비 등이 필요

- 동해항 3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나, 국가관리항만 중 유일하게 컨테이너 처리기능이 없음
- 북방항로 활용 및 환동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이를 통해 컨테이너를 포함한 신규 물동량 창출이 필요함
- 동해항 3단계 공사 완료 시 현재 처리중인 물동량은 신항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구항은 신항의 보조 역할, 묵호항은 국제여객터미널 유치 등의 형태로의 항만 기능 재정비가 필요함

토론 5. 「지역 현안 해결위한 ‘작은 협의체’부터 구축해야」

진형주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지역 현안 해결이 전제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지역 대학주민어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작은 협의체 구축’ 필요

■ 지역 거버넌스의 시작은 각 분야 현안을 다룰 ‘작은 협의체’ 구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 지역 주민의 해결로부터 시작해야 강원도 지역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작은 일부터 풀어나가는 협의체 구축 필요, 협의체가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질 경우 통합적으로 조정·협약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구축될 수 있음
- ‘작은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다양한 산업이 창출될 수 있음
- 강릉원주대학교 내 ‘다시마지원협의체’, ‘친해양레저협의체’ 등이 주요 사례가 될 수 있음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거버넌스에 있어서 지역대학 역할이 매우 중요

- 지역대학은 정부 지역대학 지원 사업을 유치해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작은 협의체 구축 시 지역대학이 중심이 되어 협의를 이끌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토론 6. 「강원도 해양수산정책 수립·지원 위한 싱크탱크 역할 적극 수행」

육동한 강원연구원 원장

강원도 해양수산 기반 지역균형발전 큰 그림을 KMI와 함께 그려나갈 예정, 북극연구 전진기지 구축, 연안방재연구센터 건립,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 등 지역 해양수산 사업 발굴 및 현안해결에 노력

■ 해양수산 지역정책 및 내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융·복합 정책 개발 필요

- ‘해양수산 전국포럼’의 첫발걸음을 강원연구원에서 내딛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하고, 세미나를 통해 제안된 여러 의견들은 향후 KMI와의 협력을 통해 반영할 예정임
- 내륙과 해양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 해양수산정책의 발굴과 해양레저, 해양심층수, 어업, 양식업 등 기능별·분야별 발전이 아닌 통합적 정책 개발이 필요함

■ 강원 지역 해양수산정책 과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 필요

- 동해항 부두에 제2쇄빙연구선이 정박할 수 있는 모항으로 지정하여 신북방시대 북극연구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변화와 연안 침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안방재연구센터를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임
-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 구축, 연어외해가두리양식 기반 구축 등의 강원 지역 해양수산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이러한 정책 과제 해결을 위해 강원도 내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짐

시사점

‘해양수산 전국포럼’, 지방분권화 시대 해양수산 기반 지역균형발전 이끌 동력으로 기대

■ 명실상부한 중앙·지방정부와 연구기관, 지역 산·학·연·정 간 공론의 장이자 해양수산인의 컨센서스 도출을 위한 협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

- 지역발전위원회, 해양수산부, 12개 광역지자체 시·도, 12개 시·도 연구원, 26개 지역대학, KMI,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소, 지역 협·단체장, 지역상공회의소, 언론사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해양수산인 협의체로 설립됨

■ 해양수산 분야 지역현안과 발전정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의 해양수산 정책 수립·이행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 2018년까지 전국 13개(세종시 포함) 도시에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 중앙 및 지역정책을 발굴·조율하고 상호협력 방안 제시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통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중앙과 지방’, ‘량과 질’, ‘육지와 해양’,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조화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균형’된 지역발전 추진해야

■ 중앙과 지방 정책 조화, 양질의 성장, 육해 상생 연계발전, 개발과 보존의 조화, 전통산업 유산과 혁신적 신산업 간 융합 등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 모색 필요

- 각 분야의 ‘균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은 관련된 지역 현안 하나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며, 각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소규모 협의체’의 활동이 중요함

■ 해양수산, 해운·항만·물류에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균형화된 정책으로 담아내야

- 항만물류, 수산, 해양환경, 해양영토, 해사안전, 해양관광·레저, 해양자원에너지 개발 등 분야별 국가 해양수산정책이 연안·해양 지역발전과 연계되어 추진될 때 정책효과는 그 부문의 합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강원도가 지닌 바다의 잠재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지역 특수성과 강점에 기반한 해양수산 발전계획 수립 필요

■ 강원도가 가진 연안·해양·수산 자원 잠재력을 잘 활용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수성과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적 해양수산정책 수립이 필요

- 정부의 신 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최적의 지리적 위치, 깊은 수심을 활용한 심해연구 활성화와 풍부한 해양관광자원 등의 기회와 강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 경제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강원도 특유의 해양수산 잠재력과 저력을 보여줘야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 바다를 이용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강원도가 ‘해양도시’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필요 있음
- 강원도 기반 국립해양수산대학교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현안 해소, 규제 완화 및 지역 해양수산 유산 활용 통한 ‘사람’ 중심의 혁신·융합적 일자리 창출 필요

■ 국가 해양수산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연계 강화 노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실질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 제고로 이어져야

- 지역 기반의 혁신적이고 융합적 사고에 기반한 정책 수립, 규제완화와 지원강화를 통해 젊은 인재들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 조성이 필요함

전통산업의 신산업 혁신 사례 : 강원도 속초 ‘칠성조선소’의 ‘오래된 미래’

- 개요) 1952년, 속초시 청초호에 세워진 칠성 수리조선소의 변신
- 의의) 전통산업(수리조선소)과 신산업(역사+문화+산업+예술, YCraftBoats사 설립)의 혁신융합 * YCraftBoats사: 2014년부터 2년여 개발기간을 거쳐 2016.6월 레저선박 브랜드 출시(국내 기술로 만든 국산 1호 카누&카약)
 - 1) 칠성조선소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에코 뮤지엄’(이야기+ 산업유산)
 - 2) Craftmanship을 중심으로 한 ‘오픈 팩토리’(문화+산업)
 - 3) 산업유산과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예술가 레지던스’(예술+장소성)
- 목표) 이야기와 지역유산, 문화와 산업이 연계된 복합 공간 조성 및 운영을 통해 강원도 속초의 대안적이고 새로운 문화, 관광 장소로서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

KMI 동향분석

| 구분 | 제목 | 발행일 |
|------|--|------------|
| 제1호 |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TEU 이상 줄어든 듯 | 2016.11.02 |
| 제2호 |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 2016.11.09 |
| 제3호 |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 2016.11.16 |
| 제4호 |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 2016.11.23 |
| 제5호 |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 2016.12.01 |
| 제6호 |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 2016.12.08 |
| 제7호 |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 2016.12.15 |
| 제8호 |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 2016.12.26 |
| 제9호 |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 2017.01.04 |
| 제10호 |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 2017.01.11 |
| 제11호 |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 2017.01.19 |
| 제12호 |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 2017.01.26 |
| 제13호 |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 2017.02.01 |
| 제14호 | 빅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 2017.02.08 |
| 제15호 |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 2017.02.15 |
| 제16호 |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 2017.02.22 |
| 제17호 |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
| 제18호 |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 2017.03.02 |
| 제19호 |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방파제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 2017.03.15 |
| 제20호 |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 2017.03.24 |
| 제21호 |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 2017.03.31 |
| 제22호 |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 2017.04.07 |
| 제23호 |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 2017.04.14 |
| 제24호 |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 2017.04.19 |
| 제25호 | 어린 물고기를 살릴 자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 2017.04.21 |
| 제26호 |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 2017.04.28 |
| 제27호 |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 2017.05.04 |
| 제28호 |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 2017.05.18 |
| 제29호 | 中 앞날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 2017.05.25 |
| 제30호 | 새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 2017.06.01 |

| 구분 | 제목 | 발행일 |
|------|---|------------|
| 제31호 | 4차산업혁명의 첨병!,로보틱·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 2017.06.07 |
| 제32호 |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 2017.06.14 |
| 제33호 |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 2017.06.21 |
| 제34호 |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 2017.06.28 |
| 제35호 |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 2017.07.05 |
| 제36호 |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 2017.07.12 |
| 제37호 |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 2017.07.19 |
| 제38호 |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 2017.07.26 |
| 제39호 |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 2017.07.26 |
| 제40호 |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 2017.08.02 |
| 제41호 |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 2017.08.09 |
| 제42호 |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 2017.08.16 |
| 제43호 |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 2017.08.23 |
| 제44호 | 바다의 불청객 갯벌생이모자반,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 2017.08.31 |
| 제45호 |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 2017.09.12 |
| 제46호 | 한·러 정상회담,북방경제 협력 기회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 2017.09.13 |
| 제47호 |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 2017.09.20 |
| 제48호 |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가미 확산 우려,방역체계 마련 시급 | 2017.09.20 |
| 제49호 |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 2017.09.29 |

URL : <http://www.kmi.re.kr/>